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 **노동본부 보도자료**

|    |         |     |             |        |                        |
|----|---------|-----|-------------|--------|------------------------|
| 문의 | 김주영 의원실 | 연락처 | 02-784-5260 | e-mail | gimpolovekjy@gmail.com |
|----|---------|-----|-------------|--------|------------------------|

### **[성명]**

## **헌법은 무시하고, 안전은 내팽개치며, 노동시간은 늘리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는 김문수 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1차 토론회에서 쏟아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은 무책임한 주장과 왜곡된 인식으로 가득했다. 노동의 가치를 지키고,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18일 진행된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조법 제2조, 제3조는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 취지를 살리고, 대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기준을 반영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법적으로 명시하자는 취지로 국회를 통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하지 않은 채 근거도 없이 ‘위헌, 불법’ 주장만을 펼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도 심각하다. 김 후보는 ‘사망자가 발생한 후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나 사망자가 줄어드느냐’는 식의 발언으로, 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했다.

이 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사회적 합의로 탄생했다. 전직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면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사망사고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김 후보의 입장이라면, 이는 그 자체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 50만 명 이상이 그냥 쉬고 있다”는 발언으로 책임회피 논란까지 일으켰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국내 ‘쉬었음’ 청년이 역대 최대인 50만명을 넘었다. 이는 2003년 1월 ‘쉬었음’ 항목 조사를 실시한 이래 가장 많았던 수치로,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 스스로 책임져야 할 수치를 마치 남의 일처럼 언급하는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반도체 산업 R&D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는 자기 부정에 가까운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 김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 시절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주장했고, 그에 맞춰 고용노동부 지침을 변경한 바 있다.

스스로 지침까지 변경하며 근로시간 예외 기준을 확대했고,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불발됐음에도 “합의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안까지 왜곡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김 후보는 ‘다른 나라에는 연구부분에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경우가 없다’는 식의 일반화로, 산업 효율성만 강조하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내팽개쳤다. 과로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인식조차 없는 발언이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공약에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장시간 노동 확대 입장을 밝혔다. ▲유연근무 요건 완화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기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52시간제 예외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제를 허물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 저항으로 실패한 윤석열표 노동개악의 반복일 뿐이다.

심지어 김 후보는 ‘임금체계 개편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

데, 이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의 변경을 임금삭감 등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더라도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경영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사실상 '사용자 맘대로 임금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이다.

특히 김 후보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서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는 지역 간 노동조건의 격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헌법」 제32조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과로사와 저임금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양극화와 불평등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후보의 발언과 노동공약은 노동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불평등만 가중시킬 뿐이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보여준 발언과 공약은 '노동 없는 성장', '사람 없는 산업'을 정당화하는 사고방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배제한 경제는 결코 지속될 수도, 발전할 수도 없다. 김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무엇을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